

유로존, 단일 은행감독체제 합의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유럽연합(EU) 재무장관들은 12월 13일 유로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럽중앙은행(ECB)에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권을 부여하는데 합의함.
 - 12월 4일 개최된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이견으로 은행권 단일 감독 기구 설립에 대한 합의가 실패하였으나,¹) 이번 회의에서는 대형 은행들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독일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합의에 성공함.²)
 - 독일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을 감독 대상에서 제외시켜 부담을 덜게 됨.
 - ECB는 이번 합의로 유로안정화기구(ESM)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거나 자산 규모 300억 유로(41조 8,956억 원) 이상의 은행 또는 자국 GDP의 20%를 초과하는 대형 은행들을 감독하게 되며 이들 은행에 대한 영업 취소권, 조사권, 제재 부여 권한 등 강력한 감독권을 갖게 됨.
 - 유로존 전체 6천 개 은행 중 약 200개 은행이 ECB의 직접 감독을 받을 것으로 보임.
- 단일 은행감독체제 수립으로 유로존의 은행동맹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.
 - 우선 단일 은행감독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2013년 3월까지 단일 은행감독 체제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이 합의될 예정임.
 - 단일 은행감독 체제 출범 이후 2014년까지는 유로존 공동 예금자보호 체제와 부실 은행에 대한 워크아웃 및 청산 체제를 갖추는 등 은행동맹의 권한이 확대됨.
 - 이후 유로존 재정적자 기준(GDP의 3% 이내)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유로존 17개국이 모두 은행동맹에 참여하게 됨.

¹⁾ 프랑스는 역내 6,000개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감독을 시행하자고 요구한 반면, 독일은 다국적 대형 은행 들만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맞선 바 있음.

²⁾ 당초 합의 시한으로 예정되었던 2013년 1월 1일이 다가오면서 감독기구 설립에 서둘러 합의함.

- 마지막으로 모든 EU 회원국이 경제통합 강화 협약을 받아들여 새로운 기구와 제도에 따른 경제 주권의 공유를 인정하고 회원국 간 연대를 강화하게 됨.
 - 시기는 2014년 유럽의회 선거가 열리고 새로운 EU 집행위원장이 선출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.
-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유로안정화기금(ESM)의 부실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시기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.
 - 프랑스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직접 금융 지원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독일은 ECB의 감독 기능이 완전히 자리 잡은 이후에나 유로안정화기금(ESM)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임.

(Financial Times 등, 12/13)